

국 민 동 의 청 원 서

등록일자	2023. 9. 13.		
동의기간	2023. 9. 14. ~ 2023. 10. 12.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백승우	
제 목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p>[청원의 취지]</p> <p>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p> <p>게임 사전심의를 등급분류 거부의 형태로 게임의 유통, 배포를 사실상 금지시키는게 가능해 헌법 제 21조 제1항,제2항에 위배됨.</p> <p>이에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함.</p> <p>[청원 내용]</p> <p>2022년 10월 7일,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p> <p>이례적으로 7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p> <p>그러나 해당 청원을 담당한 문체위는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150일이라는 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p> <p>심사 기간을 이번 국회 만기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p>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위원회 간사 사이에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었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논의를 위한 준비 자료를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담긴 기사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8318>)

게임업계의 뿌리 깊은 제도적 폐단을 없애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과 목소리가 담겨 있는 청원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여전히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5만 명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을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민주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원을 접수한 문체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계류된 안전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유사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FA91356B113BA9E064B49691C1987F>

해당 이슈에 관한 기사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8318>